

일정부 정신대 관여 인정

관련자료 목록 공개... '강제성' 부인

관방장관 회견

【도쿄=김효순 특파원】 일본 정부는 6일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안부의 모집 등에 관한 자료 1백27건이 정부기관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옛 일본 정부가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3·4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군위안부 관련자료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청 등 6개 성·청에 대해 조사를 벌여 1백27건의 자료를 찾아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공표해나간다고 강조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중군위안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후속조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사이에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가토 장관은 또 중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로 간접 부인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옛 한국인 중

군위안부들에 대해 직접 증언청취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북한쪽에 대해서도 사죄의 뜻을 밝힐 것이라는 질문에 “현재 양국 사이에 수교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밝힌 자료를 내용별로 보면 △위안소 설치 4건 △위안부 모집자의 관리 4건 △위안시설의 신·증축 9건 △위안소의 경영·감독 35건 △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 24건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발급 28건 △기타 34건으로 되어 있다. 성·청별로는 △방위청 70건 △의무성 52건 △후생성 4건 △문부성 1건이고, 경찰청·노동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밝힌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소 설치=당시 군점령지역에서 일본 군인에 의한 강간 등의 불법행위로 치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군인 개인의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히 위안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음. 위안시설은 사기진작, 군기유지, 성병예방 등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안시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교육지도 참고자료의 발송이 군내부에서 있었음.

△위안부 모집자의 관리=군의 위신을 유지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모집하는 자를 적절히 인선하도록 조치.

△위안시설의 신·증축=시설물 건축에 있어 병사를 차출하는 명령 등이 발동됨.

△위안소의 경영·감독=부대별 이용 일시 지정, 이용 요금을 규정한 위안소 규정이 작성됨.

△기타=업자가 여자들을 배편으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전보가 발송됨.

외무부 “진상규명 미흡”

조원일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일본 정부의 정신대 문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정신대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재삼 확인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 비추 앞으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에 중군위안부 사죄 요구
대만 외교부장 첫 공식언급

【타이베이=AFP 연합뉴스】 쟈우 대만 외교부장은 6일 대만 정신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해 이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군부 책임 축소 저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신대 피해자나 일본 국내의 민간 연구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일부 부처의 자료만을 발표한 것은 일본 군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저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한국과 같은 취급을”

【도쿄=김효순 특파원】 중국 외교부는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요망을 일본에 전달해왔다고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 가토 일 관방장관 일문일답

피해자 증언 직접청취 고려 안해 보상문제 끝나...한국엔 별도 조치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오후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다시 밝히는 한편 두번 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가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사는 문건조사로 이뤄졌는데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증언청취조사를 할 용의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되는 관청에서 방대한 자료를 뒤져 찾아낸 것이 이것들이다. 정부 조사는 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사생활 문제도 있으므로 청취조사는 생각하

지 않고 있다.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는 있는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옛군인, 위안부의 증언들을 참고해 조사해보았으나 강제모집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직접청취조사를 하지 않는가.

=여러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청문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논쟁이 일 가능성이 있다. 또 의견대립 때 입증하기가 어렵다.

-경찰청에서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 자료를 뒤졌으나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군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조사결과 발표단계라 말하기 어려우나 여러 인사들과 한·일 양국의 의견을 들어가며 어떤 형태로 사죄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인 이외의 위안부 출신 지역은 어디인가.

=나라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고, 지역으로는 대만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도 사죄를 하는가.

=사죄의 뜻을 전달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교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 보상할 것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2국간 협상으로 보상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

이다. 보상이 아닌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미 3~4개 연구소에 관련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했는가.

=지금까지 자료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자료에 관해 문의해 조사를 했으나 모든 나라에 대해 다 한 것은 아니다.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앞으로 조사해보겠지만 명확한 자료로 판단할 문제다.

-진상규명이 됐다고 보는가.

=우리로서는 성심성의껏 했으며 그 결과 정부가 관여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관여사실을 인정한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돼 사실관계조사를 해 판단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도쿄=김효순 특파원〉